

November 15, 2006



▶ 15일 오후 평화재단 창립 2주년 라운드테이블이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6자회담 재개 전에 남북관계 복원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승환 민화협 정책위원장은 15일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창립 2주년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의 전망과 대응' 라운드테이블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그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제재론자나 대화론자 모두에게 화두가 되고 있는 대북 레버리지에 대해, "레버리지로 활용할만큼 인도적 지원이나 경험의 활성화 돼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논의는 가능하지만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할 단계에 도달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북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나가느냐는 문제에서 신뢰관계 형성이 안되면 (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잘 안되는데, 북과의 관계에서 남측이 활용할 레버리지가 별로 없다. 쌓아온게 별로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견지에서 '7.5 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의 쌀·비료 지원 유보조치를 비판했다.

그는 북핵해결 과정에서 우리의 입지는 한-미, 남-북 관계 수준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며, "우리가 한-미, 남북관계에서 아무런 역할이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동북아 재편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설 자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북인도적 지원에서 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취해나가지 않는다면 남북관계에서 레버리지가 별로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핵실험 이전처럼 남북관계가 전면 복구될 것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인도적 지원을 통해 이산상봉을 재개하는 수준의 복원은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남북경협과 관련해서는 "민간에 맡기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금강산관광과 같이 고사시켜서는 안되는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의 개입수단이 사라지는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민-관 거버넌스(共治) 강화 외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정부가 홀로 떠맡던 짐을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해 그 쪽에 넘기면 정부도 출가

November 15, 2006



분해되고 무엇보다 정치적 상황변화에 상관없이 민-관 합의에 따라 일관되게 경협을 추진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성렬, 북인권전담대사 제안도



▶ 이날 토론회에는 2백여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이에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기획실장은 북한 주민이 올 겨울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하나 군사적 전용가능성을 배제하는 접근성과 투명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북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 관심 △국가별 대응방식의 전략적 선택 △화해, 협력을 통한 점진적 인권개선이라는 정부의 '대북인권3원칙'에 대해서는 △정권변화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남북관계나 6자회담의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취급하며 △민족문제나 인간안보의 관점을 결합한다는 '신 3원칙'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에 인권대사와 별도로 '북인권전담대사'를 두어 유엔의 대북인권논의에 적극 참가, 기존 강경일변도의 대북인권결의안을 '상호협력을 전제로 하는 인권개선안'으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쌀,비료 지원을 미사일 발사와 연계해 유보함으로써 "인도적 지원이 인도적 지원이 아니게 만든" 실책을 지적하면서 "선진국의 공적개발지원(ODA) 시스템을 참고해 정부와 민간이 적절하게 역할을 재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경우 "현실적으로 정부 수준의 대북정책에서는 레버리지 수단으로서 인도적 지원을 대체할만한 존재, 대안에 대한 토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쌀,비료 지원중단 외에 북을 제재할 별다른 수단이 없는 정부의 고민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는 "인도적 지원은 제재수단이 될 수 없는데 국민세금이 들어가다보니 여론동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무분별한 언론보도를 질타하면서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탄력을 부여하려면 여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vember 15, 2006



또 "그간 북이 해줘야 할 것이 있다"며 "바로 신뢰회복 조치의 일환으로 북이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기념식이 끝나고 기념촬영.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법륜 이사장, 서영훈 고문.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토론회는 김영수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조성렬 실장과 양문수 교수의 발표, 권영경 교수와 김부겸 열린우리당 의원,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 윤여준.이부영 전 의원, 이승환 위원장,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토론이 4시간 가량 계속됐다.

토론회에 앞서 기념식이 열렸다.

통일뉴스 2006-11-15 오후 8:51:26

November 15, 2006

Übersetzung

“Die Aktivierung der innerkoreanischen Beziehungen vor den Sechs-Parteien-Gesprächen ist unumgänglich“

Der Projektleiter der zivilen Zusammenarbeitsvereinigung, Lee Seung-hwan hält die Aktivierung der innerkoreanischen Beziehungen für unbedingt notwendig. Er verlangt von der Regierung eine feste Positionierung hinsichtlich der Nordkoreapolitik. Die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könne auch durch zivile Unternehmen wahrgenommen werden. Nur elementare Projekte, wie Reisen zum Keumgang Gebirge, sollte die Regierung direkt fördern.

Der Projektleiter des Internationalen Forschungsinstituts, Cho Sung-ryol, sprach sich derweil für eine Fortführung der humanitären Unterstützung für Nordkorea aus. Allerdings solle mehr Klarheit bei der Verteilung geschaffen werden und die Verwendung von Hilfsgütern für das Militär müsse stark reguliert werden. Professor Yang von der University of North Korea Studies kritisierte die Vorgehensweise der Regierung. Der Stopp der Hilfslieferungen an Nordkorea nach der Atomwaffenkrise mache deutlich, dass es sich bei der Unterstützung von südkoreanischer Seite nicht allein um humanitäre Unterstützung handele, sondern vielmehr um eine politische Maßnahme.

Prof. Kwon vom Wiedervereinigungsinstitut beleuchtete einen weiteren Aspekt: “Da die Unterstützung Nordkoreas aus Steuergeldern finanziert wird, muss Rücksicht auf die Meinung der Bürger genommen werden.“ Deswegen sei auch die Rolle der Presse durchaus wichtig.